

조선대 로스쿨 탈락 충격 속 대책 고심

“의혹 해소 안되면 효력정지 신청 낼것”

조선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선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조선대 자체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대학간 경쟁을 유발한 정부의 로스쿨 설치 인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女교수 없는 것 제외하곤 단점 없어 사시 합격자 수 결정적 기준 아닌듯

■ 도대체 기준이 뭐가

조선대 구성원들은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던졌다. 여교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겉으로 드러난 단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개인 전까지 3명을 총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조선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도 선정결과에 비춰볼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조선대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5명. 그러나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가 24명이 넘지 않을 경우 모두 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 전남대·전북대를 제외한

광주권역의 다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대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다. 법학전문도서관과 로스쿨 전용 기숙사까지 완벽히 시설 투자를 끝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빠질 것이 없다는 것이 조선대측의 주장이다. 대부분 로스쿨 신청 대학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이나 기숙사 등에 대해 현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조선대 법대 한 교수는 “장서 수역시 전용 도서관에 비치돼 있을 때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있는데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대가 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법학전문도서관 전경. 조선대는 장학기금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5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교수 15명 새로 영입·500억 투자 전문도서관·기숙사 달리써야 할 판

■ 막대한 투자 공염불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기금 350억원을 비롯해 조선대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모두 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수 임급 등 교수진 확보에 들어간 비용은 뺀 수치다. 조선대가 로스쿨 유치를 선언한 뒤 외부에서 영입한 교수는 모두 15명. 1인당 연봉을 7천만원으로만 잡는다 해도 연간 10억원이 넘는다. 겸임 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는 모두 28명이다. 이들 교수는 로스쿨 유치에 실패해도 신분이 유지된다.

장학기금 외에 법대 건물 신축비 50억원, 도서관 리모델링에 20억원, 도서관구입비 3억원 등이 투입됐다. 법학전문도서관이나 전용 기숙사는 다른 활용방법을 연구해야 할 판이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의 법학과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조선대 법대 김법철 학과장은 “아직 기약은 없지만 다시 로스쿨 유치를 도전할 것인지, 방향을 선회할 것인지 등 법대의 거취는 차후 대학본부와 협의 후에 거론할 문제”라며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라고 말했다.

교직원·학생 500명 상경 시위 교육부·청와대 항의 방문 예정

■ 앞으로 계획은

조선대는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명단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사기준과 점수 공개를 요구했으며, 31일로 예정된 예비인가 대학 발표도 의혹 해소 후로 미루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31일에는

조선대 구성원 500여명의 상경 시위도 예정돼 있다. 직원이나 교수 뿐 아니라 학생들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덕원 부총학생회장은 “광주·전남만 1곳인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교수협의회 의장도 낙선운동과 교육부 및 청와대 항의방문에 뜻을 함께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로스쿨 선정 평가 기준 자의적”

국회 교육위 질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가 거론돼 시선을 끌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위원이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오늘 언론에 로스쿨 지정 대학이 발표됐는데 사실이나”고 물은 그는 구체적으로 “인구 30만명인 제주에는 1개교, 인구 170만인 전북에는 2개교가 지정됐지만 인구 320만명인 광주·전남에는 1개교만 지정됐다”며 “광주에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있어 제주와 전북까지 통

합 관할하고 있다. 지방의 4대 사학 가운데 3개 대학이 국립대학과 함께 지정됐지만 광주·전남만 그러지 않았다”고 조선대 탈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가 “(양 의원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했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검토 중이고 내일(31일) 발표한다. 양해를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결국 “양해하겠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수습대의 버스로 분노한 시민, 사회단체, 동문이 올라 오게 된다”고 김 부총리를 거듭 압박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도 이에 대해 “양 의원의 지적에 논리적·실질적 타당성이 있으니 재고했으면 한다”고 거듭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靑 임기말 레임덕 설움 ‘톡톡’

로스쿨 선정 조정 움직임에

법학교육위 사퇴카드 거론

청와대가 임기 말 ‘레임 덕’ 설움을 토틈하고 있다.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청와대의 조정 움직임에 ‘집단 사퇴’ 카드를 거론하는가 하면 공식 발표에 앞서 로스쿨 대학 선정 내용을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대 등이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에 탈락되는

등 로스쿨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조정에 나서려 했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집단 사퇴’ 카드를 들고 나와 황당했다”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집단 사퇴’ 카드로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선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학교육위원회가 당초 31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해야 하나 지난 29일 청와대에 보고 직후 선정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리는 등 교활한 행동을 했다”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라던 그랬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선정 만족 “전국 5위권 대학 거듭날 것”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대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에 예비인가가 난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본인가도 문제없이 받아 내겠다는 계획이다. 법대 학장과 함께 로스쿨 설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온 우정주 전남대 교무처장은 “로스쿨 유치는 강경채 전남대 총장의 8대 아젠다 중 하나이자 지역의 영원이기도 하다”며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전남대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인가가 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앞으로 법대 교수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청서 내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 과정에 대한 충실도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설계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지난 2004년 10월 법대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로스쿨 설치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법조인 출신 10명 등 전임교수 35명을 확보했으며, 50명선까지 충원할 계획이다. 전남대 로스쿨은 광주가 민주·평화·인권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공익인권법’을 특성화했다. 송오식 전남대 법대 부학장은 “정원 수가 당초 신청한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지만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5위권 내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GRAND OPEN

푸른산 레크리얼

전남 광주시 소재, 첫 삼양계사 공장을 리모델링한 이파르텔 임대공장

▶▶▶ 1100㎡~2800㎡ 세어 나옴 ▶▶▶ 11세~18세 어린이 어린이 전용 시설 ▶▶▶ 1100㎡~1400㎡

* 임대 계약 기간 : 1년~3년 / 임대 보증금 : 1000만원 / 임대료 : 100만원 / 관리비 : 100만원 / 주차비 : 100만원 / 기타 : 100만원